

“법관 · 검사 비위행위 엄중 처벌해야”

정동영 의원, 민간 추천 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법관징계법’ · ‘검사징계법’ 각각 대표 발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6일, 법관과 검사의 각종 성범죄와 비위 행위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징계위원 과반을 내부 인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위원회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추천 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2011년 이후 법관 및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법관 10명과 검사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관의 경우 ‘명동 사채왕’이라 알려진 최모씨에게 사건 정략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가 징지 1년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각종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이 징계권에 그치는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 기강을 세우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검사의 경우 2016년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해임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성 비위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검사 12명 중 면직과 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3명으로 나머지 9명(82%)은 경고·견책·



“다음에 또 만나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된 다음날인 26일 북한의 응원단, 선수단, 취재기자, 수혜원 등이 밝은 표정으로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북으로 출경하고 있다.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체 위원 7명 중 민간 위원이 3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로 과반수를 제식구로 채울 수 있는 구조”라며 “법관과 검사의 비위행위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여성의 참여를 확대·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시 법관과 검사 중 1명 이상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민간위원 중 1

명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검사징계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 1명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 위원은 외부위원 중 1명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징계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이 제출한 지난 5년간의 징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법관 1명과 교수 1명을 각각 여성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법관징계위원회 성비 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검찰 내 ‘Me Too’ 운동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법조계에서 여성들은 약자, 소수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법조계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여성 법조인의 진출을 확대·보장하여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법부 내에 확 대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의원 진안 의정보고대회 1000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진안의정보고대회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안중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진안군수, 박명석 진안군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의 지난해 성과와 2018년 의정계획이 발표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진안군민들께서 보내주시신 성원에 힘입어 홀대받던 전북예산을 정상화하고, 5개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진안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하고 진안군민이 보내주시신 성원에 보답하고 효도하는 효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선거, 상임위, 입법, 민원 부분의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해 만든 영상을 상영한 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안군의 국가예산 확보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높였다.

이항로 군수는 축사를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이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 많은 활약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가장 일 잘하고 든직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진안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안군민들께서 더욱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정보고대회를 마친 안 의원은 이 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이 제기된 진안군 상전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경청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의정보고대회를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청장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수혁 국회의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수혁 의원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수성동 이수혁 국회의원사무소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최재성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김민 디지털대변인,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특히 박병석, 원혜영, 김진표, 조정식, 노웅래, 홍영표, 유승희, 최은열, 김두관, 금태섭, 김경우, 박경미, 김중민, 김경협, 안호영, 김병관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모여 이수혁 의원의 중요 원내입지를 확인시켰다.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은 지난해 말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지역위원장 3차 공모 끝에 지원, 올해 1월17일 추미애 당대표로부터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읍은 변할 수 없는 고향”이라면서 “고향 역시 전통적으로 정읍과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곳으로 고향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나라이든 나라, 정정당당한 정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아지는 시작점인 이 길을 당원동지들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수혁 국회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 합격 후 줄곧 대한민국 외교안보 기동 역할을 해 왔다.

주 독일대사,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림픽도 끝나고... MB 곧 소환될 듯

‘140억 회수’... 뇌물·직권남용 등 적용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포착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 내림에 따라, 적용 혐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만큼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병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

을 다스 ‘실 주주’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이 무거워지게 거론된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회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소송비용 대납 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 대납을 대가로 2009년 이회수 삼성그룹 회장이 사면됐을 가능성 등이 의심된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점쳐진다. 투자금 회수 과정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은 투자금 반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확인한 다스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정황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를 의심하게

한다.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 혐의 등도 적용 가능하다. 다스 자회사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회사에 4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다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조사 이후 다음주께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